
**「국가기술허격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세부 시행방안**

2014. 12.



순서

I. 배경	1
II. 추진 경과	2
III. 세부 운영방안	3
1. 포상금 지급대상	3
2. 신고서 접수	4
3.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5
4. 조사결과 조치	6
5. 포상금 지급	7
<붙임 1>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9
<붙임 2>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	11
<붙임 3>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	12
<붙임 4> 검정수탁기관별 국가기술자격종목 현황	13
<참고자료> 국가기술자격법 및 시행규칙	14
<별지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16

I. 배경

-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 제고 및 자격 미취득자 고용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는 취득 자격의 불법대여 등을 근절할 필요
 -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제도, 행정처분 등을 시행하였으나
 - 행정력 등의 한계*로 단속·제도만으로는 자격증의 불법 대여 등을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
- * '13년말기준(누적)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 는 약 26백만명
- ** 대여자는 별도의 노력 없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대여 받은 자는 저비용으로 의무고용이나 사업면허 조건을 달성할 수 있어 불법 대여의 유인이 큰 반면, 현실적으로 적발은 어려움
- 이러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활용성과 효용성 증대를 위해 자격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II. 추진 경과

- '10.2.17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도 도입방안 검토*
 - * 동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제2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에 자격의 신뢰도·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불법대여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방안을 검토기로 함
- '11.11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국회(18대)제출(임기종료로 자동폐기)
- '12.7.19.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국회(19대) 제출

□ '14.5.20. 국가기술자격법* 개정·공포('15.1.1 시행)

-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자격증 사용자, 대여 알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제15조의4)

□ '14.11.20.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15.1.1 시행)

<신고포상금제 관련 시행규칙(2015.1.1.시행) 주요 내용>

- ▶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처 :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 조사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내 처리기간 연장 가능)
- ▶ 신고포상금 :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
 - 동일한 부정행위가 복수로 신고된 경우 1건으로 보며, 부정행위 적발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배분(신고인이 합의할 경우 합의된 방법에 따름)
- ▶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규정(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경과, 공모 통한 부정신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한 경우, 이미 조사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
- ▶ 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금지

Ⅲ. 세부 운영방안

제도 개요

-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사용·알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 ❖ 불법행위 신고서 접수는 자격종목별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하되,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는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행함
- ❖ 포상금은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서 지급
 - 포상금액은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한도는 300만원)

1. 포상금 지급대상

- 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 (법 제15조의4 제1항)

- 법 시행일(2015.1.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행위

* 법 시행일 전에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

시효 관련 유의사항

- ▶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행위로 제한
- ▶ 행정처분에 대한 소멸시효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위반행위 시점과 관계없이 행정처분 가능(단,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

- 자격증을 도용한 경우에는 빌려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 조사결과 도용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자료를 사법기관에 이송

2. 신고서 접수

□ 신고 방법

- “부정행위 신고서”(별지서식)를 작성하여 자격종목별 주무부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직접·팩스·인터넷 등)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시행규칙 별표7) : <붙임1> 참조

- 다만,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등의 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을 위임(시행령 제29조 제1항)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에 제출

*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시행령 별표6) : <붙임2> 참조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명*으로 하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서에 첨부

- * 향후 신고포상금의 수령주체 논란 및 무분별한 신고 등 방지
- 포상금 수령을 원할 경우 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

<주요자격의 신고처(예시)>

주요 자격	주무부처	부정행위 신고처(접수)
전기공사기사 등 전기관련 자격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 도청의 민원실
건축기사 등 건축·토목·측량 관련 자격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용접 기능사 등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센터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위험물 관련 자격	국민안전처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 도청의 민원실
해양조사산업기사 등 해양· 항만 관련자격	해양수산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산림기사 등 산림·임업 관련 자격	산림청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 도청의 민원실

* 조사 및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시·도)에 위임한 기관 :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민안전처, 농진청, 산림청, 환경부(일부), 해수부(일부),

□ 신고서 접수기관

- 접수기관 : 자격종목별 주무부처(수임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접수된 신고서가 다른 기관 관할인 경우 즉시 이송
- 공동 소관인 7개 자격(<붙임1> 비고란 참조)은 대여된 자격의 사용목적 (관련법률)을 기준으로 주무부처를 판단
- 신고서 조사 관할
 - 대여자격증의 사용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처분기관에서 조사함이 원칙
 - *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의 용이성 등 감안
 - 사용사업장의 폐업·소재불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여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관에서 조사

3.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 조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 신속히 진행
 - 이미 조사가 진행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신고서 **반려조치***
 - * 다만, 먼저 신고된 내용이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사항 입증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중인 내용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내용 및 첨부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여부 결정
 - 신고서는 **60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30일 범위 내)할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 신고인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경우
 -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하되,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종결처리
- 신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신상정보**에 대해 일체의 **비밀 유지***
 -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신고인이 피신고인과 대면하지 않도록 출석일시를 달리하는 등 조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
 - * 제33조의6(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 시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
 - * 복수로 신고된 사항을 조사한 경우 포상금 배분의견, 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와 사전 공모 등 지급제한 대상(시행규칙 제33조의5 제3항)에 해당되는지 확인

4. 조사결과 조치

☐ 위반사항(대여사실) 없는 경우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없어 종결코자 할 경우에는 신고인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통보)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시에는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을 첨부

□ 위반사항(대여사실) 있는 경우

○ 청문 실시

-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취소·정지)을 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 실시(법 제17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같은법 제22조)

○ 행정처분

- 청문결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조치
 - * 국가기술자격 취소 및 정지의 기준 : <붙임 3> 참조
- '02년 법 조항 일부 위헌결정*에 따라 '04.12.31. 이전 발생('05.1.1. 이후에도 지속되는 경우는 제외)한 대여 1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정지)을 할 수 없음에 유의(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대여 1회는 그대로 유지)
 - * 법 조항 일부 위헌결정 관련 행정처분(정지)시 유의사항 : <붙임 4> 참조

○ 조사결과 등 통보

- (지방고용노동관서 통보) 행정처분기관(주무부처 또는 자치단체)은 조사를 완료한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와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
 - * (통보 내용) 처분일자·종류 등 처분내용,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배분의견 등
- (검정수탁기관 통보) 아울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검정수탁기관*에도 그 내용을 통보(행정처분 기록관리)
 - * 검정 수탁기관별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 : <붙임 5> 참조
- (사법기관 통보) 행정처분 후 관련 자료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사법기관(경찰)에 수사의뢰(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임에 유의)
- (신고인 통지) 조사결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결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기관(지방고용노동관서)을 안내

5. 포상금 지급

□ 지급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조사완료일 또는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 명의의 금융기관(은행 등) 계좌에 입금

□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신고 건당 50만원(동일인에 연간 300만원 한도)
-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해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간주
 -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조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지급하되,
 -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을 합의할 경우 그에 따름

이중접수 및 포상금 배분시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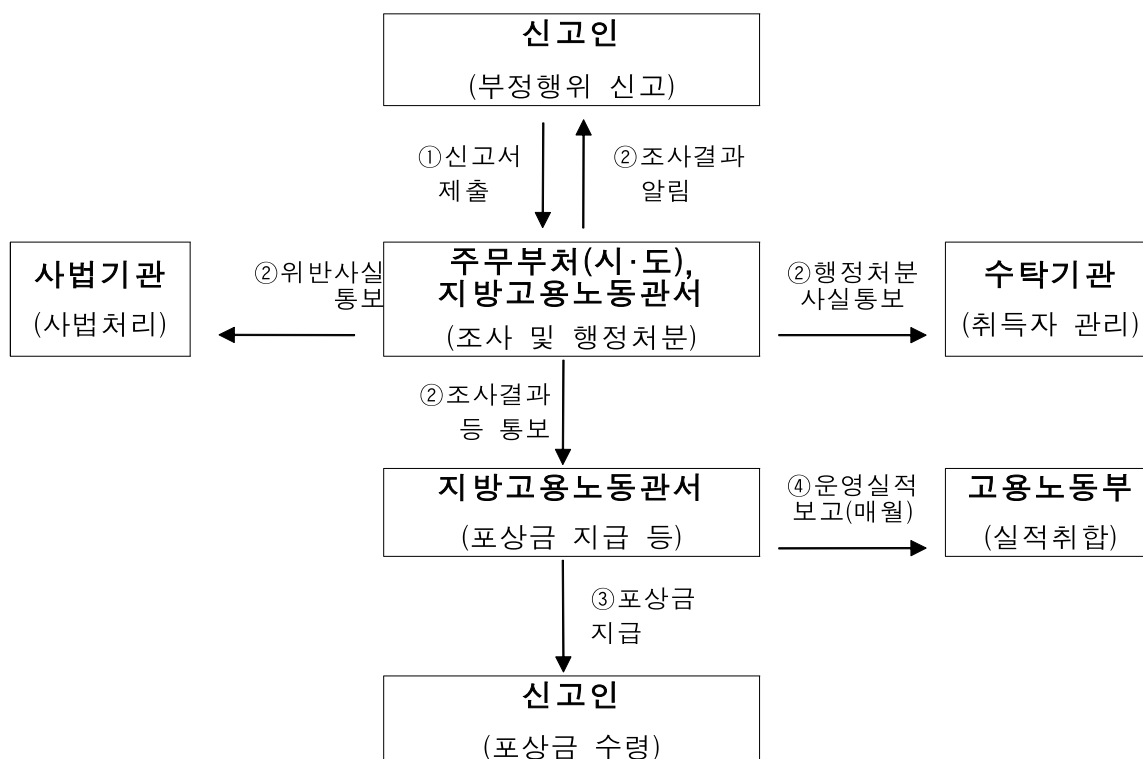
- ▶ 이미 조사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제한(시행규칙 제33조의5 제3항 4호)대상 이므로 신고서 반려처리
- ▶ 먼저 신고된 내용이 증거부족 등으로 위반사항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중인 내용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내용 및 첨부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여부 결정
- ▶ 비슷한 시기에 복수로 신고되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된 증거자료, 조사과정에서의 협조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배분결정

- 2인 이상 연명으로 신고 된 경우 신고인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 포상금을 배분하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 배분

○ 지급 제한(시행규칙 제33조의5 제3항 4호)

- 자격증 대여행위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해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
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사법)
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 * 지급제한 대상임이 사후 확인된 경우 지급기관은 즉시 환수조치

신고 포상금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붙임 1>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4.11.20.>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제7조 관련)

주무부장관	검정 대상 기술자격 종목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청장)	사회조사분석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설비, 통신선로, 통신기기,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기기운용, 정보관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정보보안,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원자력,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종목
국방부장관	궤도장비정비
행정자치부장관	승강기
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화약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자출판, 영사, 컨벤션기획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 식육처리, 화훼장식,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토양환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종자, 시설원예, 원예, 버섯종균, 식물보호, 농화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 설비보전, 전자부품장착(SMT), 정밀측정, 금형, 금형제작, 프레스금형,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재료조직평가, 열처리, 화학분석,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자, 반도체설계, 석공, 패션머천다이징, 시추, 자원관리, 광산보안, 광해방지,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컬러리스트, 제품응용모델링, 웹디자인, 가스, 공장관리, 품질경영, 품질관리, 포장, 광학, 광학기기, 신발류제조, 생물공학, 석공예,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임베디드, 반도체장비유지보수, 그린전동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	의공, 의료전자, 이용, 미용(일반, 피부, 네일), 세탁, 임상심리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환경부장관	대기관리, 대기환경, 환경, 수질관리,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온실가스관리
환경부장관 (기상청장)	기상예보, 기상, 기상감정
고용노동부장관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전산화계운용사, 직업상담사, 다른 주무부장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자격 종목(기술사 종목 제외)
국토교통부장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자동차보수도장,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항공기체정비, 토질 및 기초, 지질및지반, 토목품질시험,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철도토목,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도장, 도배, 철근, 방수, 건축품질시험,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가구제작, 교통, 지적, 천공기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항만구역 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 잠수,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해양조사, 항로표지, 어업생산관리, 항만 및 해안, 양화장치운전,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컨테이너크레인운전(항만구역 내)
국민안전처장관	위험물, 소방, 소방설비, 화재감식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가공,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造酒), 수산제조, 식육처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전문상담사

비고: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동 소관으로 하고, **토양환경**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공동 소관으로 하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공동 소관으로 하고, **전자계산기제어, 사무자동화**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공동소관으로 하며, **수산제조**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동 소관으로 하고, **식육처리**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공동소관으로 하며, **컨테이너크레인 운전기능사**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검정은 국토교통부장관(항만구역 외)과 해양수산부장관(항만구역 내)의 공동소관으로 한다.

* 승강기(행정자치부장관) : 국민안전처장관 소관으로 이관예정

<붙임 2>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4.11.19.>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 (제29조제1항 관련)

소관 부처	위임기관	수 임 기 관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환경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비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경찰청	경찰청장	지방경찰청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산림청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비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갖춘 기술능력 또는 기술인력에 대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처리업자
3.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같은 법 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자
4. 「먹는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붙임 3>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14.6.12>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 (제34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1호	자격취소
2. 국가기술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여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2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
3.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 제16조 제1항제3호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취소

※ 기술자격증의 대여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여와 관련된 자격이 2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각 자격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여의 순서에 따라 그 횟수를 산정하여 해당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기술자격증이 동시에 대여된 경우에는 대여기간이 장기인 기술자격증의 대여를 나중의 대여로 보되, 대여기간도 동일한 경우에는 최근에 취득한 기술자격증의 대여를 나중의 대여로 본다.

검정 수탁기관별 국가기술자격 종목 현황(‘14.12월 기준)

수탁기관(8개소)	검정 자격 종목(526개)
대한상공회의소 (15종목)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비서 1·2·3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2·3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워드프로세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종목)	원자력발전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기사
영화진흥위원회 (2종목)	영사산업기사·기능사
한국콘텐츠진흥원 (3종목)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 (2종목)	정보보안기사·산업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6종목)	방송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정보통신기술사·기사·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기능사, 통신설비기능장, 통신기기기능사,
한국광해관리공단 (7종목)	자원관리기술사, 광해방지기술사·기사, 광산보안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시추기능사
한국산업인력공단 (478종목)	위 종목 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참 고> 국가기술자격법 및 시행규칙(관련규정 발췌)

<국가기술자격법>
<p>제1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4.5.20.] [시행일 : 2015.1.1.] 제15조의4</p>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p>제33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하거나 또는 대여를 알선한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한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u>별지 제17호의3서식</u>의 부정행위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부정행위를 조사한 주무부장관은 부정행위 신고서 사본 및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11.20.] [시행일 : 2015.1.1.] 제33조의3</p>
<p>제33조의4(포상금의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11.20.] [시행일 : 2015.1.1.] 제33조의4</p>
<p>제33조의5(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제33조의4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 건당 50만원으로 하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②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복수로 신고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2.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3.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4.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4.11.20.] [시행일 : 2015.1.1.] 제33조의5

제33조의6(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1.20.] [시행일 : 2015.1.1.] 제33조의6

<별지서식>■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14.11.20.>

부정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대여자	성명	대여자자격증		
		주소	(전화번호:)		
	사용자	성명(업체명)	대표자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대여 알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자의 부정행위(대여, 대여자격증 사용, 대여 알선)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별지에 작성 가능)				
	신고내용				
포상금 수령시 희망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사용, 알선]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통장사본
------	------------------------------

210mm×297mm(백상지 80g/㎡)

